

##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 두 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dbsong@cdi.re.kr)

### 목 차

< 요약 >

- I. 시작하며
- II.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현황
- III. 피해현황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 IV.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전략
- V. 정책적 시사점

## 《요 약》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에서 북서쪽 10km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고로 서해안 지역 환경 및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이고, 사고발생 초기 만족할 만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사고발생 후에도 피해금액의 최대 배상한도가 3,000억 원이고, 땀손어업·음식 및 숙박업 등은 배상 받기 어렵다는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지역주민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해어민 및 주민배상을 포함하여 현행 방제시스템 체계, 피해규모,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지원내용, 환경복원과 모니터링 방안,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해양오염 방제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된다. 현행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총괄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제오염 방제를 시행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구, 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법적지위가 부여(해양환경관리법)되어 방제현장에서 해양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해안오염방제는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해양오염방제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시스템은 해양과 해안 모두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사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재해와 달리 재난사고의 경우 법정소송 의해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회적 연대감을 파괴하고, 정부·사고책임기업·주민 등의 갈등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장 및 양식장 생산기반이 상실됨으로서 어민의 가정경제가 몰락하게 될 뿐 아니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영위해 왔던 음식 및 숙박업소, 유어선, 판매업 등 관광산업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하여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된다. 또한, 사고지역의 지명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음에 따라 지역이미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 갯벌, 섬, 사구 등 다양한 생태계로 형성되어 있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에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해양오염 피해를 입은 서해안지역의 완전한 환경복원 및 미래지향적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번 사고에 책임 있는 기업들은 서식지 보호와 생태계복원계획 마련 등 수산자원과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재원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는 소송원고가 되어 사고책임기업들로부터 환경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업으로부터의 재원마련을 통해 ‘지역발전기금(가칭)’을 조성하여, 항구적 환경복원과 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및 기념관을 설립함으로써 사고재발방지와 환경피해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어민 및 지역주민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서는 이번 사고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고, 정부에서는 주민의 보상에 앞서 시급히 선 보상을 하며 IOPC펀드나 사고책임기업들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음식 및 숙박업 손해, 맨손어업, 고용피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나 언론에서는 3,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강조하기 보다는 피해를 본 것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주민피해배상을 위한 모든 내용들은 서해안 유류오염 관련 주민지원 특별법(가칭)에 명시되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지역의 이미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정부에서는 타 지역에 우선하는 관심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 I. 시작하며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에서 북서쪽 10km 해상에서 정박중이던 홍콩선적 14만 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와 해상 크레인을 실은 삼성중공업 소속 1만 1,800톤급 부선이 충돌하여, 유조선의 좌현 탱크 5개소 중 3개소가 파공되어 원유 1만 2천 547kl(78,906배럴)가 바다로 유출된 국내 최대 해양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후 정부에서는 충청남도 태안군을 비롯한 서해안 6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해양 및 연안오염 방제, 배상을 위한 조사 등을 추진해 왔다.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주민,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외형적으로는 사고이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접근성이 어려운 섬 지역, 해저 등을 중심으로 전남 서해안, 멀리는 제주도까지 타르덩어리가 발견되고 있어 아직도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현행 방제시스템, 특별 재난지역지정 및 지원내용, 환경복원과 모니터링 방안, 피해 어민 및 지역주민 지원방안,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전략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서해안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고 이전보다 더욱더 매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II.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현황

### 1. 해양오염방제시스템 현황

정부조직법 제44조에는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함에 따라 해양오염 방제의 주무기관은 해양경찰청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장에서는 선박에서 오염물질 배출시 방제조치는 방제의무자(선박의 선장)와 해양경찰청, 500톤 이상의 유조선이 오염물질 배출시 해양환경관리공단(구, 해양오염방제조합)에 방제선의 배치를 위탁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안의 자갈·모래에 부착된 기름은 시장·군수가 방제조치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금번사고와 같이 대규모 해양오염발생시 해양경찰청장이 총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해양에서의 실질적인 오염방제는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오염 확산 예측은 해양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경찰청의 지휘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으로 법적지위가 부여되어 있다.

반면, 연안폐기물은 지자체가 총괄하는 가운데 연안폐기물 처리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산업폐기물공제조합, 태안군에서 담당하고 있어 해양오염방제업무와 이원화되어 있다.

<표 1> 기관별 방제담당기능

구 분		소속부서	기 능
해상방제	행정자치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팀)	-	오염 및 복원계획 전반관리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제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 방제대책본부 설치
	해양오염방제조합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제작업
	해양연구원	공공기술 연구회	해양오염확산예측
	충청남도 태안군	-	피해최소화 대책마련 해안부착유 방제조치 인력 및 장비동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군(軍)	-	군인력 및 장비동원
	산림청	-	방제용 항공기 지원
	지방해양수산청	-	어장 및 양식장 보호조치 항만시설 이용편의제공
	경찰서	-	치안유지 방제작업관련 교통통제
해안방제	환경부	-	환경오염방지 육지폐기물의 처리 유류폐기물처리대책반 운영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고상폐기물위탁처리 (공제조합)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환경부	폐기물처리대책반 참여
	산업폐기물공제조합	-	육지폐기물의 처리
	해양오염방제조합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산부	액상폐기물처리
	충청남도	-	해안방제작업 폐기물처리대책반 참여
기타	태안군 (환경보호과)	-	해안방제작업 폐기물처리대책반 참여
	수협중앙회 (서산수협)	-	어민피해조사 및 보상업무 보상업무 매뉴얼 발간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	환경부	해양생태계 오염현황파악 야생동식물 구조·치료 및 피해조사 (대한수렵협회연계)

이밖에 수협에서는 어업피해 및 보상 조사업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양생태계오염환경조사, 야생동식물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자치부장관, 차장 : 소방방재청장)를 설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와 소속직원의 파견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2. 중앙정부의 대응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사고가 발생하자 12월 7일 11시에 소방방재청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피해예상지역 주민에게 휴대폰 문자를 송출하였다. 아울러 충청남도 등 자치단체에 긴급방제를 지시하였고, 국방부에 방제장비 및 인력동원 등 지원협조를 요청하였다.

12월 8일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등 6개 시군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진공·흡입차량 동원가능업체 활용을 통보하였다.



## 2) 방제실시

12월 7일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해경경비함정 및 해양오염방제조합 방제선 등이 방제작업을 개시하였다. 방제를 위해 인력 4,220명, 함정 59척, 방제선 59척, 항공기 6대, 유회수기 50대, 오일펜스 11,854m, 유흡착제 14,079Kg, 유처리제 115,888ℓ(유관기관 포함)를 동원하였다.

해양경찰청에 방제대책본부, 대산청에 지방사고수습본부 운영, 태안지역 방제대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유출유 확산방지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상 유출유의 방제를 위해 물포 및 유처리제를 사용하여 분산 처리하였고, 유회수기를 통한 방제와 함께 해양표착지역에 방제조합, 방제업체 및 탱크로리 등 지원 장비를 집중 배치하였다.

아울러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 등에서도 헬기, 함정, 방제물자, 병력 등을 동원하여 방제를 실시하였다.



[사진 1] 해양경찰의 방제선

### 3) 재난사태 선포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재난사태 선포는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재난지역’선포와 달리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한 인적, 물적 동원과 지원을 포괄하는 조치이다.

정부가 12월 8일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등 6개 시군에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은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고성지역 대규모 산불사태 이후 사상 두 번째이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지역의 피해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재난경보발령, 인력, 장비, 물자동원, 공무원 및 민방위대 비상소집 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정부기관들도 소관분야별 협조와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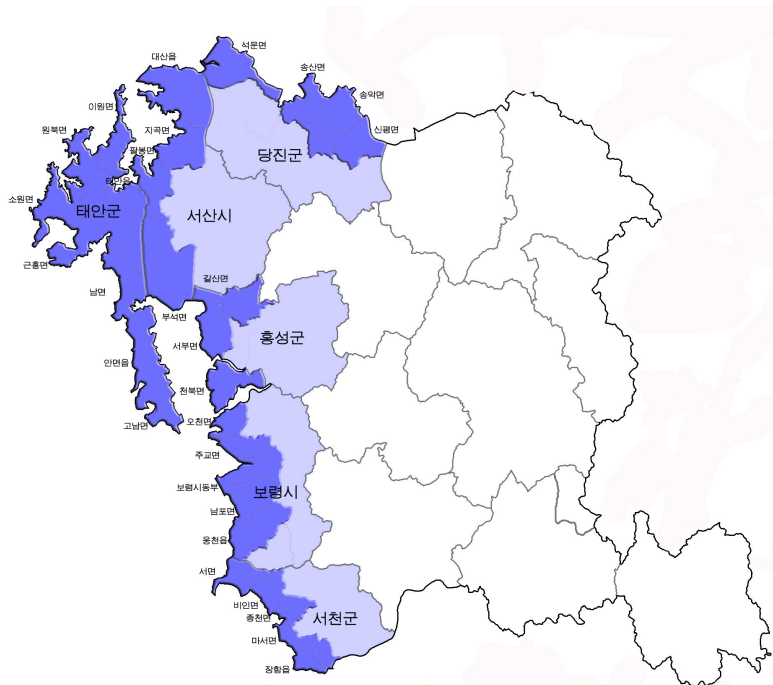
-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당해 지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 및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 임무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제공

###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고 발생 4일 후인 2007년 12월 11일 중앙정부는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등 6개 시군에 대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59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국고의 추가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용자, 상환유예·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적용 등의 지원,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림 1]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 5) 피해보상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는 12월 18일 태안군청 대강당에서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피해어민들과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해조사단의 첫 설명회는 해수부차관, 최민호 충남도행정부지사, 수협관계자, 어촌지도사, 피해시군 관계자, 피해어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전문가의 보상청구절차, 기준, 청구방법 등에 대한 설명, 피해어민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진 2] 피해조사지원단 현지설명회

## 6) 피해조사 및 보상준비 활동

해양수산부는 법무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연구원(KORDI) 등 민관 전문가들로 피해조사지원단을 구성해 태안 현지에 개설되는 지원단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어민들의 피해보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현장 사진, 비디오 자료 등의 기초적인 입증자료는 언론보도를 통해 중요성이 널리 홍보됨에 따라 비교적 잘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입증자료가 보험사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의해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성 있는 보완과 검토가 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보험금 사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수집과정과 보상청구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여 국제유류오염기금과 보험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피해신고접수 및 증거 확보, 어업피해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오염사고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양생태계 복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방제작업 현장별 안전책임자를 지정하고 긴급생계비 교부액을 충청남도에 지급하였다. 오염해역복원을 위한 정밀조사인력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해역에 대한 회수 및 수산물 안정성 검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연안정화평가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피해조사단 구성 회의를 개최하였다.

## 7) 사고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정책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에서는 1월 18일 현재 사고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예 산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해대책예비비 74억원 지원(12.12)
- 긴급방제용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12.10/10억, 12.21/40억)
- 국비 300억원 긴급 생계지원금 송금완료(충남도 '08.1.2)
- 피해지역 학교운영지원금 등 20억 지원(12.20)

### ○ 금 융

- 해당지역 금융·세정 종합지원센터(농협, 수협) 설치(12.14)
- 농·수협을 통해 특별영어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1,500억원 신규 지원 (저리융자)
- 특별지원자금 최대 1,500억원(기은 500, 산은 1,000) 금리우대
- 충남지역 총액대출한도 400억원 추가 배정(한·은)
- 기존 대출금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유예
- 중소기업,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우대보증 제도 개선

### ○ 세 제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납기를 연장(최장 9개월)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성금·구호물품 및 자원봉사자(일당 5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 피해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6개월 징수 유예

#### ○ 후생복지

- 태안군 재난선포지역 4개면 유·초·중·고교 재학생 중 피해 학생에 대한 수업료, 학교급식 지원('07.12~'08.2)
- 특별재난지역 연고 공무원, 장병 재난휴가 실시

#### ○ 전문인력 및 장비 투입

- 오염해역 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추진('08.1.2)
  - 캐나다전문가 초청 인력전문교육 실시
- 피해배상 문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 법률구조공단 서산지부에 변호사 등 6명 배치

(자료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유류 유출사고 수습상황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safekorea.go.kr>, 1월 18일 접속)

### 3.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사고가 발생하자 충청남도에서는 도지사의 주재로 긴급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하였다. 또한, 행정부지사를 사고발생 지역에 급파하여 육지의 피해복구를 직접 지휘토록 하였다.

도청 내에 상황실 설치와 함께, 서해안 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를 태안군 현지에 설치하였으며, 6개 시군에 예비비 59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12월 24일에는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와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및 지역미래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선배상, 맨손어업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건의하였고, 충남지사를 중심으로 일본 후쿠이현 유류유출사고시 자치단체 차원의 피해복구와 주민피해배상에 대한 의견교환차 및 자료 수집을 위해 일본의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를 방문하였다.

태안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자 지역사고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예비비 2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하였다.

사고지역에서는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사고수습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실 운영방향, 오염방제대책, 보상 및 간접피해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표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관련기관·법인 현황

기관·법인 조직명(소속)	업 무 내 용
피해조사지원단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조사 지원 및 상담</li> <li>• 유류피해 총괄지원, 관리</li> </ul>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대책본부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조사 배상지원(홍보 및 교육, 상담 등)</li> <li>• 항구복구 지원</li> </ul>
재난종합상황실(태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조사지원 및 상담</li> <li>• 방제지원 및 총괄관리</li> </ul>
방제대책본부(태안해양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제종합대책 추진</li> <li>• 방제대책회의 운영</li> <li>• 방제물자, 장비 및 인력지원</li> </ul>
피해대책위원회(서산수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신청 접수, 상담</li> <li>• 피해조사 지원 등</li> <li>• 피해보상 청구, 소송대행</li> </ul>
피해대책위원회(태안남면수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신청 접수, 상담</li> <li>• 피해조사 지원 등</li> <li>• 피해보상 청구, 소송대행</li> </ul>
피해대책위원회(안면도수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신청 접수, 상담</li> <li>• 피해조사 지원 등</li> <li>• 피해보상 청구, 소송대행</li> </ul>
유류피해관련 비리 신고 센터(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증물품 매매, 절취, 위공여 등 단속</li> <li>• 성금 악용, 유용, 오용단속</li> <li>• 허위사실로 금품절취, 갈취 등 단속</li> </ul>
대화감정평가법인 (서베이어:피해자측 조사 등 전문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별 피해조사 실시 및</li> <li>• 피해자 상담 및 자문</li> <li>• 증거물 채집, 감정, 피해액 산출 등</li> </ul>
한국해사감정평가법인 (가해자측 조사 등 전문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별 피해조사 실시 및 피해자 상담 및 자문</li> <li>• 증거물 채집, 감정, 피해액 산출 등</li> </ul>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피해관련 법률자문</li> <li>• 피해보상관련 소송변론 등</li> </ul>

자료 :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2008년 1월 18일 접속

## 4. 수산업협동조합의 대응

어업인 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어민들의 피해보상 청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유류오염사고의 보상액 산정과 청구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 책자는 유류오염 손해의 보상제도, 유류오염 사고 발생초기의 조치사항, 효율적인 방제작업 방법, 유류오염 피해의 유형과 손해액 산정, 유류오염 손해의 보상 청구 등으로 나눠 문답식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서해안 지역의 일선 회원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피해조사 활동을 돕기 위해 유류오염 피해조사 지침을 따로 제작해 배포하였는데, 이 책자는 수산업의 직접피해와 간접피해에 대한 피해조사 및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는 방제작업과 피해복구, 금융지원을 비롯한 각종 피해보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책위는 방제 현황파악과 유관기관과의 자료교환 등을 담당하는 상황반, 방제 작업비 교섭과 방제비 대위지급 관계 등을 처리하는 방제작업 및 복구지원반, 증거자료 확보방법과 피해어업별 보상청구서 작성 요령 그리고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 등을 지도하는 어업피해보상업무지원반 등 모두 3개 대책반을 운영키로 하였다.

서산수협에서도 어업인의 피해보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서산수협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태안관내 피해지역 어촌계장 등 45명으로 ‘서산수협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지역 증거보전 신청, 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변호사 등 선임, 손해액의 산정 및 조정,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배상액 수령, 상대방과의 합의문제, 기타 손해배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대책위원회에서는 수협중앙회 현장지원반, 해양수산부 피해조사지원단과 함께 피해지역 어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절차와 대상 등에 대한 현장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국제유류오염피해 배상제도 안내, 어업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절차소개, 어업피해 배상관련 절차 및 사례소개 등을 피해 어업인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협에서는 피해어민을 위한 모금 및 방제활동과 함께 2008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바다사랑, 태안사랑’을 테마로 한 고객참여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5. NGO의 대응

### 1)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http://www.kfem.or.kr/>)서는 사고지역 오염조사, 사고토론회 개최, 시민구조활동과 모금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서해기름유출 블로그를 개설(<http://blog.kfem.or.kr/westsea/>) 하여 자원봉사참여, 기름유출 국내외사례조사, 서해현장소식 등을 메뉴로 개설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들도 기름유출사고지역에 대한 오염방제작업 및 피해주민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2) 녹색연합

녹색연합(<http://www.greenkorea.org/>)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연구 및 현장조사 보고서 발간, 녹색바다지킴이를 통한 방제활동, 피해 지역주민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녹색연합의 지역조직을 통해서도 방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3) 전국재해구호협회

1961년 전국의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민간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http://www.relief.or.kr/>)에서도, 기름유출 지역 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KBS, MBC, SBS 등 공중파방송 및 케이블방송협회 등과 함께 2007년 12월 14일부터 2008년 1월 18일까지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서해안 기름피해 주민돕기 성금모금’, ‘자원봉사참여’ pop-up창을 마련하고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성금모금 및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4) 참여연대 등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 YMCA, 푸른태안 21, 민변 대전충청지부는 삼성중공업 예인선-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서해기름 유출사고 피해주민 대상의 법률지원을 위한 태안 현지 법률상담소 “서해기름유출사고 공익법률상담소(Legal Aid Clinic)”를 1월 6일 열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공익법률상담소는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완전복구와 완전배상 및 가해자 책임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률지원을 한다. 법률상담소는 첫째, 소외받기 쉬운 피해자들에게 입증방법 또는 무시되기 쉬운 피해유형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둘째, 기름유출사고의 “완전 복구, 완전 보상, 가해자 책임”의 3원칙에 맞는 ‘올바른 법률적 해결방안’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홍보하는 법률지원을 한다.

법률상담소의 초대 소장은 민변 대전 충청지부 부회장인 남현우 변호사가 맡았고,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과 대학학생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법률봉사단 60여명이 1월 7일부터 순환 근무 형태로 상근하며 40여명의 변호사 지문단이 이들의 상담업무를 전화 인터넷 등으로 지원한다.

수산업, 숙박업, 요식업, 안면도 지역 등의 다양한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10여명의 피해자 대표들이 참석한 주민 설명회에서 남현우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해 기업측의 중과실이 입증되면 IOPC의 배상한도 이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률상담소는 이와 같이 제대로 된 보상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특히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 배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음식 및 숙박업 손해, 맨손어업, 고용피해 및 환경피해 등의 주민에 대해서 법적대응 방법, 입증방법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태안현지 공익법률상담소 : 태안읍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내 041-673-4651~5).

### 서해안 기름 피해 주민 돕기 성금모금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이 태안의 기적을 만듭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발생한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서해안 지역 어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구호협회에서는 한순간에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피해 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피해 주민 돕기 성금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모금기간: 2007년 12월 14일 ~ 2008년 1월 18일
- 기탁방법
  - 인터넷 기탁
  - 온라인 입금(예금주 재해구호협회)
  - ARS 기탁 : 060-700-1004 (1통화당 2천원)
- 영수증 발급 신청
- 문의: 1544-9595

성금모금 계좌 안내

성금 기탁하기


**전국재해구호협회**  
National Disaster Relief Association

##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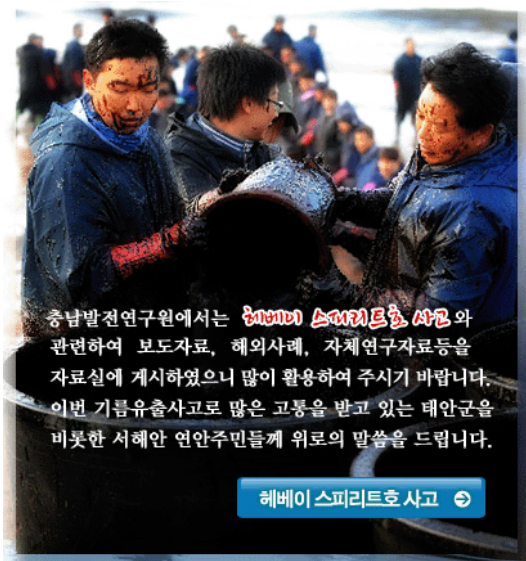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NGO이외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환경운동, 연안환경보전연합회, 환경문화시민연대,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환경정의, 환경수호운동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민간 NGO와 종교단체에서도 자원봉사활동, 피해어민에 대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6. 충남발전연구원의 대응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자 연구원을 중심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대책 T/F팀을 구성하고, 홈페이지에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2월 20일 전문가 워크숍을 원내에서 개최하였고, 12월 24일에는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와 함께 충남도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원내 기름유출 T/F팀에서는 피해주민 지원특별법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양오염 공동평가팀에 참여하였다. 향후 분야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 Ⅲ. 피해현황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1. 피해현황

지금까지 정부가 집계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잠정 피해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 종합상황판, 1.18 현재).

우선 충청남도의 어장피해는 11개 읍·면 473개소 5,159ha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이중 태안군이 8개 읍·면 361개소 4,088ha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산시가 3개 읍·면 112개소 1,071ha에 달한다.



[그림 2]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연합뉴스, 2007.12.17)



해수욕장피해는 태안군 만리포, 천리포를 비롯하여 4개면 15개소에 달하며, 서산 가로림만~태안 안면읍 내파수도 연안 해안선 167km 구간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지역피해는 태안, 보령 등 5개 시·군 59개 도서에 타르성 기름이 표착되어 있고 가의도, 삼시도 등 9개 도서의 오염이 심한 상태이다.

전라남도의 피해 상황은 피해면적 22,185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양장이 7,829ha(신안6,887, 무안778, 영광164), 마을어장이 14,356ha(신안10,121, 진도3,168 등)에 달하고 있다.

도서지역피해는 전라남북도 42개 도서에 동전에서 주먹크기의 경화타르가 유입되었다(군산 7, 부안 3, 영광 3, 신안 13, 진도 16).



[그림 3] 김양식장 피해지역(동아일보, 2008.1.7)

## 2.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1)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고는 지역공동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재해의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이고 주민들이 협력하여 복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회적 연대감이 그 치료방법이 된다.

그러나, 보팔, 체르노빌, 쓰리마일, 러브운하, 그리고 엑손발데즈호 사건과 같은 기술적 재난의 경우 광범위하고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사회적, 정신사회적 영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지역사회가 ‘쪼먹게’되고 사회적 연대감도 파괴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사회와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유일한 보상획득의 수단인 법정 소송에 의해 장기화되었다. 엑손발데즈호 사건의 경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이 같은 법정 소송은 사회적 연대감을 파괴하고 지역사회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키 오토, 2005).

엑손발데즈호 사건으로 코르도바 시민의 절반가량인 어부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사고 이후 어민가족의 30%가 도시를 떠났다고 한다.

또한, 경제기반을 다양화하지는 논의가 나왔을 때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분열로 인해 거의 모든 개발 계획안들을 놓고 지역사회가 양극화되었다. 논란중의 하나는 도로나 항만 등 대규모 사업은 어업공동체의 근본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도 양식장 등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관광객 숫자가 감소할 경우 주민들의 생계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신적 외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역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 피해지역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나 성금의 경우 배분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엑손발데즈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민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평성이 결여된 배상, 법적 소송 등이 수반된다면 주민들은 희망을 상실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수반되며 이는 곧 지역사회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전통적인 어촌공동체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 이전의 환경으로 복원하는 사업은 상당한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함께 향후 생계대책이 마련될 때만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2)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사고해역은 바지락, 전복, 해삼, 소라, 김, 미역, 백합, 굴, 새우, 꽃게, 우럭, 놀래미, 낙지, 쭈꾸미, 까나리 등의 해조류, 패류, 어류가 생산되는 양식장 및 어선어업 어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어장의 생산기반이 상실됨으로써 어민의 가정경제가 몰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생산기반이 정상화될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어가인구는 충남전체 어가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체인구의 약5%(태안군 14.7%)인 27,278명(2005년 총조사인구)이 어가인구인 점을 감안해 보면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이번 사고로 인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영위해 왔던 음식 및 숙박업소, 유어선, 판매업 등 관광산업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감소에 따른 지역주민의 매출하락은 지역주민의 소비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사고해역 연안지역은 해안관광지로서의 높은 명성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지명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음에 따라 지역이미지의 추락이 우려된다. 지역이미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추락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수반됨으로써 이중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사고로 인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대부분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고는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 갯벌, 섬, 사구 등 다양한 생태계로 형성되어 있고 생물다양성 또한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오염유출사고는 환경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의 노력의 상당수의 기름찌꺼기를 제거하였지만, 2008년 1월 10일 현재 총유출량 12,547kl 중 33%인 4,153kl를 수거하는데 그치고 있다. 자연증발량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의 기름찌꺼기가 해저에 가라앉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양유류오염이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한다는 것이 국내외 유류오염사고를 통해 입증됨에 따라 사고해역 및 연안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IV.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방안

### 1. 완전한 환경복원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미국은 엑손발데즈호 사고발생 20년이 되는 올해까지도 수억 달러의 재원을 투자하여 환경복원 및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

<표 3> 엑손발데즈호 프로젝트

구 분	주요프로젝트 내용	수행기간
피해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바다생물(고래, 수달, 포유동물, 곰, 바다표범, 바다사자, 고래류, 조개류, 게, 굴, 새우, 연어, 연어알, 새)의 손실</li> <li>• 영세기구 손실, 휴양경제 손실, 수산업 비용, 상업어업 평가가격효과, 연안거주민 손실편가, 표면오일지도 등</li> <li>• 심층수 피해, 공기 및 자연자원 종합가치, 문화자원 피해 등</li> <li>• 데이터베이스 관리, NRDA 데이터에 대한 GIS시스템, GIS 지도 및 분석 손실, 복구 등</li> </ul>	1989-1993
일반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름유출에 대한 기록영화, 전통적 생태학적 지식</li> <li>• 바다생물 복원(연어, 바다표범, 수달, 새우) 등</li> <li>• 유출기름 처리시설, 해안선 기름제거, 토지소유자 평가프로그램, 생계복원계획, 음식안전시험, 해안선평가연구 등</li> </ul>	1993-2008
서식지보호	• 서식지복원 및 새로운 지원, 서식지보호 계획 등	1993-2004
모니터링	• 해안모니터링, 근해모니터링, 태평양모니터링, 표층 모니터링 프로그램, 조간대 회복, 바다생물 모니터링 등	1993-2008
공공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관리, 프로젝트관리, 행정 과학적 관리 및 공공정보, 공공정보 및 행정, 장기모니터링 계획, 복원프로그램 최종보고, 10년 심포지엄, 10년 후 엑손발데즈호, 재정위원회, 복원팀, 복원계획의 개발 등</li> </ul>	1989-2008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다생물 생존모형, 프랑크톤 연구, 상업적 어업종합 및 모델링, 정보종합 및 복원, 기름치유기술, 해안가의 자연지리학, 지역사회구조의 변화, 하향식 및 상향식 과정, 리모터센싱, 3D바다상태 시뮬레이션, 잔존기름에 의한 위험요소 평가 등</li> </ul>	1993-2008

반면, 씨프린스호 사고는 방제종료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환경복원의 개념도 없이 육안으로 보이는 해상 또는 육상의 유류에 대한 긴급방제대책만 세웠으며, 이후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도 형식적으로 수행한 한계가 있었다.

사고 발생 직후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잔존유류조사, 방제작업 감시, 환경모니터링 등의 생태계복원 노력을 실시하였으나, GS칼텍스사의 비협조로 2002년까지 3차례의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쳤다.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에서 2002년부터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차례 사고 지역 해양생태계 조사 및 대책수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여수시의회에서 삭감당해 이마나도 수행하지 못했다.

다행히 이번 사고의 경우 항구적 환경복원 및 모니터링을 위해 환경부에서 10년간 생태계영향조사 및 복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이 일대의 자연자원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엑손발데즈호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후 지금까지도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0년으로 기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엑손발데즈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와 이번 사고에 책임 있는 기업들은 서식지 보호와 생태계복원계획 마련 등 수산자원과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재원을 조성하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는 미국의 엑손발데즈호 사고나 스페인의 프레스티지호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서라도 사고책임기업들로부터 환경복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사고책임기업으로부터 재원마련을 통해 항구적 환경복원과 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설립, 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사고의 재발방지와 환경피해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지역 및 기업의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유조선 프레스티지호는 스페인 해안선에서 300km 떨어진 곳에서 260km 떨어진 곳으로 예인되며 2만 5천톤 정도의 원유를 유출하고 3,000m가 넘는 심해로 가라앉으면서 다시 상당량의 원유를 유출하여 스페인과 프랑스 해안가에 대규모 환경피해를 일으켰다. 당시 이 사건에 적용되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는 1억 7천만 유류(한화 약 2,400억원)였다.

그러나 스페인 및 프랑스 등의 피해 국가들이 청구한 액수는 총 7억3천만유로(한화 9,000억원 이상)로서 이보다 훨씬 컸다. 또 스페인 정부의 청구금액 중 3억2천만 유로가 환경복구와 방제비용에 대한 것이었고, 프랑스 정부의 청구금액 중에서 6천 7백만 유로가 방제비용 및 환경침해 방지비용에 대한 것이었다. 즉, 두 정부가 합해서 약 4억유로(한화 약5,6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경복구와 방제비용으로 지출하였던 것이다.

이 금액은 당시 IOPC펀드 배상한도의 두 배가 넘는다. 1989년 엑손발데즈호 사고에서는 정부와 엑손정유사가 함께 3조원에 달하는 복구비용을 지출하였다. 우리 정부도 이번사태에 있어서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의식하지 않고 환경의 '완전한 복구'를 목표로 공적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박경신, 2008).



## 2. 피해어민 및 지역주민의 완전한 배상

씨프린스호 사고시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사회 주민들 상당수가 기존의 생업을 포기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사고에 있어서 환경복원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어민 및 지역주민의 완전한 배상이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민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중과실 여부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규모는 IOPC 배상한도를 넘을 것이 확실시 되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선박회사들의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중과실의 판단을 위해서는 항해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박경신, 2008).

이번 사고에서 3,000억 원이라는 상한선을 그어놓고 피해배상이나 환경복구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경우 피해배상과 환경복구 모두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배상금액 3,000억 원이라는 숫자에는 방제금액이나 환경복원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설방제회사 등에 비해 여러 가지 증거제공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주민들간에도 남이 더 많이 받으면 내가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에 따라 갈등이 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언론에서는 3,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강조하기 보다는 피해를 본 것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배상에 앞서 시급히 선배상을 하고, IOPC펀드나 사고책임기업으로부터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박경신, 2008).

프레스티지호 사건에서 IOPC펀드의 배상한도는 1억 7천만 유로(한화 약2,400억원)였으나, 스페인 및 프랑스 등의 피해 국가들이 청구액 액수는 총 7억 3천만 유로(한화 약 9,000억원)로서 이보다 훨씬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경우 피해액의 90%에 대해 주민들은 피해배상을 받았다.

스페인에서는 총 6억 1천만 유로가 청구되었는데 이중에서 스페인 정부가 5억 9천만 유로를 방제 및 환경복구비용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선배상에 대한 구상 명목으로 청구하였고, 나머지 2천만 유로는 스페인 정부의 선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청구였다. 당시 스페인 정부는 주민피해에 대해 2억 5천만 유로를 선배상하였다. 즉, 스페인 정부는 90%이상의 주민피해에 대해 주민들에게 선배상을 하고 IOPC에 추후 청구하였던 것이다.

선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박한 피해자들이 씨프린스호 사고 때처럼 사고 책임기업이 제공하는 적은 금액에 쉽게 합의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주민들이 거대한 IOPC나 사고책임기업에 맞서 완전한 배상을 받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선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박경신, 2008).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에서도 피해접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특히 비수산업계에서는 피해접수라는 것이 이루어진 적조차 없다.

물론 아직 피해 집계는 실제 올해의 어업 작황이나 관광객 수를 봐야 알겠지만, 피해 집계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소득 입증이다. 사고나 난지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이루어지는 소득집계와 1년이 지난 소득집계는 신뢰성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피해자들이 소득집계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피해입증에 대한 IOPC펀드의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보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OPC펀드의 조사자(surveyor)가 피해 집계 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다. 이들은 3,000억원 배상 한도내에서 배상만을 할뿐이며 IOPC펀드 내규가 인정하는 증거자료만을 인정할 뿐이다.

소득증거가 없을 경우 진술서라도 주변사람들로부터 작성하여 소득에 대한 입증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 집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집계된 피해가 IOPC펀드의 청구를 넘어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고책임기업들에 대한 직접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음식 및 숙박업손해, 맨손어업, 고용피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박경신, 2008).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해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은 대부분 어업권에 관한 것이었고 음식숙박업 피해 등에 대해서는 간접손해라 하여 배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어업권 소송에서 관공서에 등록되지 않은 패류채취, 경영자가 아니라 직원으로서 어업 및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배상도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의 경우 ‘음식숙박업손해’, ‘맨손어업’, ‘고용피해’ 모두 IOPC의 배상범위에 포함되므로 안심이 되지만, IOPC의 배상한도 내에서 액수를 사정할 때 또는 IOPC의 배상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모든 사항들이 충남도와 정부에서 추진중인 서해안 유류오염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가칭)에 명시되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지역이미지 쇄신 및 지역발전전략 마련

현행 해양오염 피해배상에는 피해어민 등에 대한 지원규정은 있으나, 지역자산 손실에 따른 지역이미지 가치 피해에 대한 지원규정은 없다.

우리가 양식장 및 어장 등 개별피해 어민이나 주민들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하는 동안 서해안지역에 대한 지역이미지 가치의 하락부분을 누락하였다. 충남 서해안지역은 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 갯벌, 섬 등의 지역이미지로 인해 높은 관광이미지 가치를 유지해 왔으나, 이번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형성된 지역이미지 가치를 원상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정부에서는 타 지역에 우선하는 관심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서해안에서 계획 및 추진중이던 해양리조트사업, 복합테마파크 조성, 리조트 개발, 바다목장, 독살복원, 수산종묘 방류사업, 굴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해안안트사업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해안국립공원, 사구, 갯벌 등에 대한 완전한 복구비용 지원, 피해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농어촌개발사업 우선지원, 지역현안사업의 우선추진, 공공기관 연수 및 행사의 사고지역 개최, 피해 양식장의 휴식년을 통한 직접지불제 도입, 지역산업의 구조변화를 위한 지원, 꽃박람회 등 이벤트의

개최지원 등과 같이 지역이미지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피해지역의 환경복구와 피해지역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긴급한 방제가 마무리 되면 피해지역의 발전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지역의 물리·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역재생사업에 초점을 둔 지역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즉, 사고 이전의 서해안 지역보다 더 upgrade된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재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물리적인 개발을 넘어서 지역경제의 재건, 지역문화의 부흥, 그리고 농어촌의 생활양식 구축을 포괄하는 새로운 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 번 사고지역의 해양오염 사례, 해양오염극복과정, 자원봉사자의 노력, 환경오염 피해현장의 복원, 동식물의 환경오염피해 등을 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는 환경오염 전시·학습공간과 해저에서 발견된 선박 및 도자기를 전시할 태안해양유물박물관(가칭)을 한 장소에 건설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V. 정책적 시사점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청정해안이던 서해안을 오염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지금까지는 해양 및 연안오염 방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방제시스템, 주민피해 및 보상,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글에서는 사고발생시 정부와 자치단체 중심의 대응현황, 피해현황과 이 번 사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다음, 완전한 환경복원과 피해보상, 지역이미지 쇄신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번 사고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해양오염 방제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된다. 현행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총괄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제오염 방제를 시행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구, 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법적지위가 부여되어 방제현장에서 해양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해안오염방제는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해양오염방제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시스템은 해양과 해안 모두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사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재해와 달리 재난사고의 경우 법정소송 의해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회적 연대감을 파괴하고, 정부·사고책임기업·주민 등의 갈등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장 및 양식장 생산기반이 상실됨으로서 어민의 가정경제가 몰락하게 될 뿐 아니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영위해 왔던 음식 및 숙박업소, 유어선, 판매업 등 관광산업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하여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된다. 또한, 사고지역의 지명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음에 따라 지역이미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 갯벌, 섬, 사구 등 다양한 생태계로 형성되어 있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에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해양오염 피해를 입은 서해안지역의 완전한 환경복원 및 미래지향적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번 사고에 책임 있는 기업들은 서식지 보호와 생태계복원계획 마련 등 수산자원과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재원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는 소송원고가 되어 사고책임기업들로부터 환경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업으로부터의 재원마련을 통해 ‘지역발전기금(가칭)’을 조성하여, 항구적 환경복원과 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및 기념관을 설립함으로써 사고재발방지와 환경피해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어민 및 지역주민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서는 이번 사고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고, 정부에서는 주민의 보상에 앞서 시급히 선 배상을 하며 IOPC펀드나 사고책임기업들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음식 및 숙박업 손해, 맨손어업, 고용피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나 언론에서는 3,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강조하기 보다는 피해를 본 것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주민피해배상을 이한 모든 내용들은 서해안 유류오염 관련 주민지원 특별법(가칭)에 명시되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지역의 이미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정부에서는 타 지역에 우선하는 관심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참 고 자 료 ◆

-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safekorea.go.kr>.
- 녹색연합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http://www.greenkorea.org).
- 리키 오토(Riki Ott, PhD), 엑손발데즈호 기름유출사고의 유산, GS칼텍스 씨프린스호 해양유류오염사고 10주년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05.
- 문광명 변호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martymoon/40045564591>.
- 박경신, 태안사태의 올바른 법률적 해결방안,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 수산업동조합 홈페이지, [www.suhyup.co.kr](http://www.suhyup.co.kr).
- 정영석, 태안 해양오염사고와 방제시스템의 효율적 제고, 코리아쉬핑가제트. 2007.
- 장기욱, 해양환경생태 피해규모 산정과 배상방향, 태안기름유출 사고대응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 2007.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유류 유출사고 수습상황보고, 2008.
- 충남발전연구원·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태안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및 지역 미래발전전략 모색, 태안 우리바다 살리기 제1차 세미나, 2007.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 [www.cdi.re.kr](http://www.cdi.re.kr).
- 태안군청 홈페이지, [www.taean.go.kr](http://www.taean.go.kr).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www.kfem.or.kr](http://www.kfem.or.kr).